기획재정부 공기업 감사 집단사표 종용

■국회 4개 특위, 부처 현황보고

국회는 24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공기업 대책특위 등 4개 특위 회의를 열어 쇠고기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공기업 특위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감사들에 대해서 불법적 사표제출 압력을 주도했다고 인정, 파문이 예상된다.

강만수 장관 "정치적 재신임 필요, 내라 했다"

PD수첩 증인 채택 이견에 쇠고기 국조 '파행'

◇공기업 대책 특위=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을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따진 반면,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방어하면서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 등을 추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각 부처에 요청, 공기업 감사들의 사표를 받았느냐"는 두 차례의 질문에 "예"라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공기업 임원들의 일괄 사표)는 정치적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감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일괄적 사표 제출 압력을 기획재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정치적 재신임'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퇴 종용은 불법"이라며 "이와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쇠고기 국조 특위=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맞서면서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쇠고기 특위는 오전 7시 반과 11시, 두 차례에 걸친 양당 간사회동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간사의 증인채택 교섭이 결렬, 오후로 연기된 회의마저 무산됐다.

핵심쟁점은 MBC PD 수첩에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 한나라당은 PD 수첩이 "소위 광우병 공포 정국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임을 들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PD수첩 문제나 방송장악 문제, 촛불시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강경진압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목적에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최인기, 민주노동당 강기갑,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는 야당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이 국제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된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생안정대책 특위=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위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추궁했다.

/임동욱·박지경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2줄 답변으로 대체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정부가 쇠고기 국조 방해" 비난

핵심자료 제출 거부·허위 기재에 선별 제출도

야권은 24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쇠고기 국정조사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가 국조 활동에 필수적인 핵심자료의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며 국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게 야권의 주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변화를 거부하고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때문에 한국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조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 대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조에 대한 사실상 방해행위로서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정부가 계속 자료협조를 거부할 경우 국조 특위의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쇠고기 국조특위 위원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중요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군사·외교·대북관계와 큰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대외비 문서로 분류해 극소수에게만 열람시키고 있으며 자료를 선별적으로만 제출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그 구체적 사례로 ▲지난 17일 대통령의 방미 면담자료를 요구했으나 4일뒤 '군사·외교·대북관계 등에 있어 핵심 기밀사안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당했고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주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문서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은 대외비로 분류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WTO와 GATT 20조 규정에 의한 분쟁사례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자료 사본은 부실 제출됐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면서 강경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특위 위원별로 자료요구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자료제출 거부는 부실한 국조를 계획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합작품"이라며 "의원실에서 22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한 건만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가축법 개정 땐 美와 통상마찰"

쇠고기 의정서, 국제법적 효력 제한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당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약칭 가축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가축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기초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내에서는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지 ▲국제규범과 충돌되는 지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축법 개정의 한미 쇠고기 의정서 효력 제한 여부에 대해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통상마찰 우려와 관련해 우선 WTO(세계무역기구)의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협정에 따라 국제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주권적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총리실 산하 독도TF팀 설치

정책조정회의서 '독도영토관리대책반' 구성키로

정부는 24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와 관련, 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이라는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구성해 독도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연구하는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조선 숙종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확인받은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초·중·고교 독도교육 강화, 한·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2009년부터 건설, 독도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및 다가구 마을 조성, 독도수비훈련 확대 실시 및 경비함정 추가배치, 독도명칭 수호 및 오기 시정을 위한 해외 동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공기업 사장 8명중 6명이 대통령 측근"

민주 박영선 의원 주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8명의 공기업 사장중 6명이 '고소영 S라인'(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서울시 출신 인맥)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기업특위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기업 개혁의 목적이 '선거공신 감투 나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임 공기업 사장 8명 가운데 토지공사 사장에는 현대건설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한 이종상씨, 철도공사 사장에는 서울메트로 사장 출신인 강경호씨, 주택공사 사장에는 영남 출신의 최재덕 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이 각각 임명됐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 사장에는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에서 참여했던 류철호씨, 부산항만공사 사장에는 영남 출신으로 캠프에 관여했던 노기태 전의원, 방송광고공사사장에는 이명박 후보의 공보특보였던 양휘부씨가 각각 선임됐다"고 그는 밝혔다. /연합뉴스